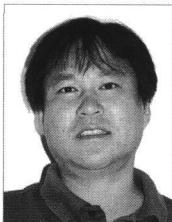


육계산업,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진 우 축산팀장
한국농어민신문

‘육계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청탁을 받았을 때 먼저 떠오른 생각은 ‘닭 값이 결정되는 데는 통상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공급과 수요인데 지금은 공급이 느는 상태에서 수요 까지 줄어드는 설상가상의 상황 아닐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급률 80%, 먹을 만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수급불균형

공급량은 느는데 소비량은 줄고 있다. 닭 값이 떨어지는 두 가지 원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공급량이다. 한국계육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계된 닭은 2억3451만9000수로 전년동기 2억1133만8000수보다 약 11%(2318만1000수) 늘어났다. 1~5월 수입량은 5만7772톤으로 4만5335톤 27%(1만2437톤) 늘었다.

물론 도계한 닭이 일시에 시장에 풀리는 것은 아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5월 13일 기준 총 721만마리를 계열업체가 냉동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해 계열업체 비축물량 279만마리에 비해 158%(422만마리)나 늘어난 수치다.

반면 소비량은 공급량이 증가한 만큼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에 따르면 올 1~4월간 가구당 월평균 닭고기 구매량은 동기간 대비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망이 3월 감소, 4월 약보합, 5월 전년수준에 이어 6월 늘어날 것으로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닭 값은 지난해 수준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산지 닭고기 가격은 kg을 기준으로 1월 1,466원을 시작으로 3월 2,223원으로 올랐다가 5월 1,560원으로 다시 떨어져 평균 1,753원을 기록, 전년동기 평균인 2,088원보다 16%(335원) 떨어졌다.

평년 가격 사이클이 4월부터 하락해 5월 하한을 찍고, 다시 6월 반등하면서 복경기인 7~8월에 최고점을 찍은 다음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형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별 문제 될 것도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특히 사육수수료를 받는 농가입장에서 본다면 계열화가 85%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닭 값이 떨어지는 것이 곧바로 농가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문제는 현재 형성되고 있는 닭 값이 생산비 이하라는 점과 이 같은 가격이 연초부터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

더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

85% 이상 계열화가 진행된 육계산업. 업체를 중심으로 산업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최소한 물가상승률 만큼(5% 가량)은 실질적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 결국 생산량을 늘리던지 매출액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도계량은 2008년에 비해 2009년 8.5%, 2010년 6.6%, 2011년 4.7% 늘었다. 공급량이 늘면 이에 맞춰 소비도 따라가줘야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날 요인은 없어 보인다.

우선 국민들이 축산물을 먹을 만큼 먹고 있는 것 같다. KDRIs(한국인영양섭취기준)에 따라 단국대학교에서 연령대별 단백질 섭취량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 1만614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권장섭취량인 하루 50g 이상을 섭취하는 비율이 65.6%(1만596명), 필요량인 40g~권장섭취량 50g 사이를 섭취하는 비율이 14.6%(2,350명)로 80% 이상이 필요량 이상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3,202명)가 필요량 미만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중 65~74세 29.9%, 75세 이상이 43.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소득별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 중하와 하에서 각각 21.5%, 3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장섭취량 이하로 먹는 사람들이 제법 많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년층일수록 축산물 소비를 줄이는 식습관과 빈익빈부의 부 현상이 더욱 극명해지는 현 사회상황에서 공적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경제적 하위계층이 육류섭취를 늘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육류 소비량 증가세가 2000년도 들어서면서 크게 줄고 있고, 특히 2008년 이후부터는 정체상태라는 점에서 축산물의 소비량은 정점에 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08~2010년 각각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1인당 연간소비량

은 7.5 · 19.1 · 9.0/8.1 · 19.1 · 9.6/8.8 · 19.3 · 10.7kg으로 거의 비슷하다. 대체수요가 있을 뿐 결국 축종간 ‘제로섬(zerosum)’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닐까?

방안 있나?

육계산업 발전. 현 상황에서 ‘자급률 제고’ ‘수출’ 말고는 딱히 떠올릴 수 있는 단어는 없는 듯하다. ‘사육비 절감’ ‘생산성 향상’과 같이 요즘 많이 회자되는 말들로 개방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이라는 측면을 빼 놓고 볼 때 궁극적으로 적정한 가격과 소비가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사육비를 절감했는데 닭 값이 낮게 형성되면 농가든 계열업체든 ‘그냥 근근이 먹고 사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없고, 생산성이 향상돼 더 많은 닭이 시장에 나오는데 소비가 안되면 닭 값을 떨어뜨리는 것 말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

국내산을 더 먹게 하고, 해외소비처를 확대하는 것 말고 답이 없다. 결국 국내 소비량과 자급률, 그리고 수출을 통 털어서 미래비전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 외에는 육계산업 발전을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십수년이 넘은 논쟁이 재현되고,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논의는 없는 듯하다. 식용닭 생산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종계의 감축 논란은 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계열업체와 계열농가간의 사육수수

료 논쟁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신생 계열업체와 기존 계열업체간의 국내시장 쟁탈전 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육계 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 관계자에게 물었다. 이 관계자 말이 이랬다. “계열업체들이 시장 쟁탈전을 벌이면서 덤펑하는 것인데 대책의 필요성이 있나? 농가들에게 피해가는 것 아니잖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계열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종계장 관리 강화, 축사시설현대화, 도계장 위생관리 강화, 육가공품 개발, 육계 관련 통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다.

‘현재의 문제점이 이러하니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로 보인다. 이는 ‘2020년 육계산업의 목표는 이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와는 전적으로 다른 이야기다.

육계분야는 사실상 정부차원의 중장기 대책이 나온 적이 없다. 업체를 중심으로 계열화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자칫 정부정책 자체가 업체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려한 탓도 있을 것이다.

국내 자급률이 80%에 육박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육계산업 발전을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입을 열어야 한다. 육계산업 장기목표를 세우고 실행프로그램을 마련해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한다는 말이다. 